

# ‘김경수 복권’ 놓고 미묘한 파장... 정치권 ‘진실공방’

대통령실 “이재명과 논의 안해”  
이재명 “여러 경로로尹에 요청”  
여당내에선 찬반 입장 갈리기도  
한동훈 “드루킹 중대사건” 반대

더불어민주당내 대권 잠룡중 한 명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내놓은 입장이 엇갈리는가 하면, 여당 내에선 복권에 대해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시절 여러 경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권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데 반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첫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인 정경신 전 교수를 복권하는 게 어떤지 물어왔고, 이 전 대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영수회담 자리에서 복권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지역 경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복권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론은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말하는 ‘직간접적 요청’이 불분명하고, 만일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 전 지사 복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이미 잠정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연말 특사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복권을 함께하려 했으나, 총선 영향을 고려해 이후로 미뤄온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여론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갈렸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은 맞지 않다는 인식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도 가능해진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이재명, 대전·세종 경선도 압승...누적 89% 득표

### 최고위원 김민석 1위 ‘성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1일 대전·세종 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며 당 대표 연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전날부터 이들 동안 치러진 대전·세종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각각 90.81%, 90.2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대전에서 7.65%, 세종에서 8.22%의 득표율을 얻었다. 김지수 후보는 1%대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오는 17일 서울 지역 경선만 남긴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21%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어 당 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된다.

온라인 투표율은 권리당원 100만8000여명 가운데 29만4000여명이 참여해 29%로 집계됐다.

후보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선 막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18.03%, 정봉주 15.63%, 김병주 14.02%, 한준호 13.66%, 이인주 11.56%, 전현희 11.54% 후보 등의 순이다.

김민석 후보가 이날도 1등을 차지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고, 김병주 후보가 전날 경기에 이어 대전·세종에서도 2위에 오르며 정봉주 후보를 뒤쫓고 있다. 당선권 마지막 순번인 5위와 6위의 격차는 0.02%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17일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일정인 서울 경선을 치른 뒤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본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대상) 30%를 합산해 결정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 문금주 “茶산업 성장동력 마련 입법 추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지난 10일 “빠른 시일 내 건강을 지키고 예절과 인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차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차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초중등 다례문화 교육의 무화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차문화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차산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국회가 아



닌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힘입어 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차산업의 변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실과 보성군, 농업기술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가 대내외적으로 정체되었던 차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작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박지원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자격 없어”

### SNS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직

## 민주 “尹, 김형석 임명 고집하면 광복절 경축식 불참”

###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사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며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들과 내통

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엄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고 쏘아붙였다.

하는 위기감이 든다’라는 광복회장의 절규를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 독재에 친일 독재까지 할 작정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며 “광복절을 일본의 중전기념일로 여기는 반민족



박 의원은 “다행히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했기에 망정이지, 사면·복권권 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걸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럴 시간이 있다면 제3차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일본 신민’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친일 행보와 굴종 외교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수권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 중 하루, 이를 사이 공식적인 참여, 불참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심 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

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함께했던 인연이 있다.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



다. 정 실장은 “후보자는 법무·검찰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왔다”며 “합리적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